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26. 9.7.(월)

1인당 국가채무는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빚이 아니며, 정부는 미래세대 경쟁력과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

<보도내용>

- ‘26.9.7. 중앙일보는 「한해 이자만 45조…1인당 나랏빚, 2년 뒤 3000만원 넘는다」, 동아일보는 「혈세로 갚아야할 나랏빚 4년뒤 1300조 넘어」 기사에서
 - “국가채무 이자비용이 ’28년 45조 원 수준에 이르고, 1인당 국가채무도 ’28년 3,000만원을 넘어설 것”, “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‘30년에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1인당 국가채무는 국민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상환액이 아니며 경제 규모나 상환능력 고려 없이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,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할 수 있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입니다.
 -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(D1)비율은 ‘27년 48.3%로 ’26년보다 3.3%p 낮아지며, ’30년까지 40% 후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중*입니다.

*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%p 이상 개선

(기존 계획상 ’30년은 ’25~’29 중기계획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)

< 25~29 국가재정운용계획 - 26~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비교 >

(조원, %)		'25		'26		'27	'28	'29	'30
		본예산	2차추경	본예산	추경				
국가채무 (GDP%)	'25~'29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-	-	1,532.5 (53.8)	1,664.3 (56.2)	1,788.9 (58.0)	-
	'26~'30	-	-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	1,519.8 (48.3)	1,600.3 (48.9)	1,659.1 (48.8)	1,734.1 (49.0)

- 또한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(D2)의 GDP 대비 비율은 54.4%로 주요국 절반 수준입니다.

* 일반정부 부채(D2)('26전망, GDP%, IMF): [韓]54.4 vs IMF선진국]108.2 [유로]87.8 [G20]118.9

- 이자지출 역시 절대지출금액이 아닌 재정규모(GDP) 대비 비중으로 보아야 하며, 이자지출 비율*과 증가폭** 모두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.

*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('25 결산): [韓] 4.6%(31.7조/684.1조) < [日] 9.2% < [美] 13.8%

** 재정수입 대비 이자지출('25): [韓] 5% < [日] 12.2% < [美] 18.7%

※ '26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 전망(GDP%, OECD, 26.6월 기준):
(한국) 1.34 (미국) 4.73 (일본) 1.71 (프랑스) 2.44 (독일) 1.17 (영국) 3.33

-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

-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29.7% 확대하여 총지출 증가율(12.8%)의 2배 이상으로 편성하였으며, 반도체·퍼지컬 AI·AI 데이터센터 등 '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'에 21.3조 원(+97.2%),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.8조 원(+22.7%)을 편성했습니다.

- 아울러 추가 세수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고, 재량·의무지출 삭감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(△107조 규모)을 실행하는 등 미래투자 확대와 채무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
- 그간 국채 발행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, 양호한 인수기반과 견조한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어 왔습니다.

- 또한, 우리나라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가 주요국 대비 긴 점을 감안하면, 차환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도 낮은 편입니다.

* 평균 잔존만기(년, '25년말 기준): [韓] 12.8 [美] 5.8 [日] 8.7 [獨] 7.8

-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와 IMF,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재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< 최근 재정 관련 국제기구, 신용평가사 주요 코멘트 >

- ▶ (무디스) 한국 정부의 '2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, 재정건전성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('26.9월)
- ▶ (OECD)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('26.7월)
- ▶ (IMF)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,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('26.5월)

-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을 반등을 뒷받침하고,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박민주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익 (ksi1206@korea.kr)

